‘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유입 촉진 고용 네트워크 전국적으로 확대

고용부 “하반기 채용 시즌 맞아 청년 취업지원 시스템 구축할 것”

전국 대학 ‘집중 취업지원기간’ 운영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 개시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박차

정부는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구직자 취업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25일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에서 열린 지역청년고용 네트워크 관계자 간담회에서 “하반기 채용 시즌을 맞아 청년들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역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직업상담, 훈련, 일경험 및 일자리정보 제공 등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가 끊임없이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쉬었음’ 청년들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이 취업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청년 고용서비스 기관들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란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의 모범사례를 확대·발전시킨 것으로 청년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지역 내 모든 청년 취업지원 기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청년고용 네트워크를 전국에 확산하여 하반기 채용에 대비해 청년 취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지역 내 청년고용 기관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관 간 참여자 연계, 프로그램 정보 공유를 통해 청년들이 어느 기관을 찾더라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선 하반기 ‘집중 취업지원기간(9~12월)’을 지정·운영한다. 지역 유관기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일자리 수요데이와 연계해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를 적극 개최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대졸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미취업 졸업생 특화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개시한다. 10여 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미취업 졸업생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경력·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시장에서 청년들이 경쟁력을 갖춰 첫 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필요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턴,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 지원 인원을 전년도 2만60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리고 체류비(월 20만원)을 신설해 지역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착공식이 24일 개최됐다. /한수원

한수원,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 착공

국내 최대 47MW 규모

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수상태양광 발전소 반경 1km 이내 약 4500명의 지역주민들이 발전수익의 일부를 공유받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4일 안동시,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안동시 독립운동기념관에서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 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47메가와트(MW) 규모로 다목적댐 내 수상태양광 설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수면 위 부력체에 태양 전자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게 되며, 발전시설은 태극기와 무궁화를 형상화해 설치할 예정으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이 사업에 참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국내 제1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집적화단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라 40MW 이상의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구역을 말한다.

윤상조 한수원 그린사업본부장은 “임하댐 수상태양광 사업은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식품업계에 물가안정 협력 요청

국제 원당·원맥 가격 하락세 고려
송미령 장관, 기업 대표 만나 논의

정부가 국제 원당과 원맥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식품업계에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협조를 요청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롯데칠성, 빙그레, 삼양식품, 샘표식품, SPC삼립, 오리온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업계 소통 강화 및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송미령 장관은 “경영비 상승, 전쟁·고환율 등과 같은 대외 불안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6월 가공식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가공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2년 12월 10%가량 치솟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오후 인천 중구 대한제당 인천제당 공장을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설탕가격 인하 협조 당부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지난해 12월 4.2%, 올해 1월 3.2%, 5월 2% 등 상승폭이 줄었다. 6월 가공식품 분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에 그쳤다.

송 장관은 “식품업계가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식품 원료 할당 관세를 올해 상반기 30개에서 하반기 37개로 확대,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커피, 코코아 등 10% 면세), 제분업계 경영안정자금 지원(4500억원) 등 식품 부담 경감 지원책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가공식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며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분야로 국민들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식품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식품업계는 “제품 가격 인하, 할인행사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대환 기자

국립종자원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

1537개 종자업체 대상 유통조사
65개소, 종자산업법 위배 행위 적발

허가 없이 식물의 씨앗을 매매하는 등 법을 어긴 의혹을 받는 종자업체 수십 곳이 당국에 적발됐다. 44개소가 형사고발 조처되고 21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상반기 중 식량·채소·과수 등 농작물 종자·묘(苗)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국내 1573개 종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종자산업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65개소를 적발했다.

42개소는 종자업 미등록(29개소), 종자 미보증(9), 생산·판매 미신고(4)로 검찰에 통보했다. 2개소는 미보증과 생산·판매 미신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21개소에 대해선 품질 미표시(8), 발아보증시한 경과(6), 품질 거짓표시(7)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검찰통보가 전년 같은기간(21건)에 비해 100% 늘어난 이유에 대해, 봄철(3~5월) 종자유통 성수기 유통질서가 취약한 전통시장과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종자원은 설명했다. 반면, 과태료 처분건수가 지난해 49건 대비 줄어든 것은 그간의 품질표시에 대한 홍보·계도 효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종자원은 무·배추 등 김장 채소와 양파 등 동계채소 종자·묘의 유통 성수기인 8월부터 10월까지 유통조사를 강화한다. 또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불법거래가 많은 관엽식물에 대해 온라인 유통거래사이트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종자원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종자업계와 협력은 물론, 소비자와 종자업자가 유통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임상심리사 시험, 학력 상관없이 응시 가능

권익위,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 개선

그간 4년제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했던 임상심리사 시험의 학력 자격 기준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의 불합리한 응시 자격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8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실무경력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학력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 분야 학위가 없어도 직무경력만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하지만,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합리적 이유 없이 4년제 대학졸업자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가기술자격 상 불합리한 학력 차별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실무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 본격화

탄소산업진흥원, 16개 신규과제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올해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6개 신규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탄소융복합소재부품 실증사업은 국내 탄소소재 및 융복합 부품을 수요처에 적용, 기술사업화를 통해 국산 탄소소재·부품의 수요시장을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탄소소재를 활용한 부품제작, 품질인증, 신뢰성 검증, 성능평가 등을 지원한다.

탄진원은 지난 4월 사업 공모를 통해 총 45건의 과제를 접수했다. 지원대상자 자격, 사업계획 등에 대한 서류검토와 함께 기업 현장실사를 진행, 발표평가를 통해 참여기업(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 시장창출형 분야 10개 과제, 아이디어 발굴형 분야 6개 과제를 각각 선발됐다.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연료전지, 환경필터 등 유망 수요산업에의 적용을 위한 실증형 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